

이슈브리프 807호  
(2026. 2.26)

## 미-이란 갈등과 핵 협상: 중동 및 국제 안보 질서 전망

# 제807호

김윤희 [yunheekim@inss.re.kr](mailto:yunheekim@inss.re.kr)



## 국문초록

본 보고서는 2025년 6월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이후 전개된 2026년 미-이란 위기와 핵 협상의 성격을 살펴보고 중동 및 국제 안보 질서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한다. 2026년 2월 현재 미-이란 관계는 핵 문제를 넘어 미사일, 대리 세력 네트워크, 그리고 인권 이슈가 결합된 복합 안보 갈등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협상 의제를 확장하는 동시에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조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미국과 주요 동맹국은 이란의 핵 능력을 역내 군사 영향력과 비대칭 억지의 핵심축으로 인식하는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과 역내 네트워크를 체제 생존을 뒷받침하는 주권적 권리 및 안보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어 핵심 인식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2026년 제네바 미-이란 간접 협상은 우라늄 농축 수준, 고농축 우라늄 재고 처리, IAEA 검증 체제 복원, 제재 완화의 범위와 속도, 단계적·포괄적 합의 방식 등 다층적 쟁점을 둘러싼 제한적 관리형 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과 이란의 핵, 미사일, 그리고 대리 세력 역량 강화는 군사적 압박과 외교 협상이 병행되는 위기 관리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제한적 정밀타격, 확대 공습, 사이버·특수 작전 등 다양한 군사 옵션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이란의 전략 자산을 점진적으로 약화하고 협상 지렛대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둘러싼 해상안보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그 결과 미-이란 갈등의 장기화는 국제 유가 변동성, LNG 공급 차질, 운임·보험료 상승 등을 통해 에너지 수입국의 물가, 재정, 성장률에 복합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2026년 중간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대이란 강경 억지 기조와 전쟁 피로·경제 비용에 대한 유권자 반응 사이의 긴장이 심화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조건 아래 미-이란 핵 협상이 전면적 갈등 해소보다는 긴장 관리와 부분적 안정에 초점을 둔 관리형 위기 국면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제어 : 이란, 미국, 트럼프 2기, 핵 협상, 복합 안보 갈등

2026년 2월 현재, 미-이란 관계는 단순한 핵 협상을 넘어 군사적 압박과 체제 안정 문제가 결합된 복합적 국면에 놓여 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란 충돌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타격이 이어졌고 미국 또한 포르도(Fordow), 나탄즈(Natanz), 이스파한(Isfahan) 등 핵 관련 시설을 직접 공격하면서 이란 핵 프로그램의 복구 속도와 실제 역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핵 협상은 과거의 기술적 협상과 달리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항모 전단과 추가 공군 전력을 배치하며 군사 옵션을 유지하는 한편, 오만과 제네바를 통한 간접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2월 17일 제네바에서 열린 2차 회담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일부 원칙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는 2월 26일 제네바에서 예정된 3차 회담은 군사적 긴장을 통제하면서 이란 핵 프로그램의 관리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이란 갈등 구조와 협상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전망한다.

### **이란의 복합적 안보 문제: 핵 협상을 넘어선 구조적 갈등**

2026년, 이란이 가진 문제는 더 이상 핵확산이라는 단일 이슈가 아닌 핵, 미사일, 대리 세력 네트워크, 그리고 인권을 아우르는 복합 안보 이슈로 재구성되고 있다. 지난 2015년 JCPOA 체제와 2025년 초기 오만 협상 단계에서는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라는 비교적 제한된 교환 구조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6년 들어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은 이란의 핵 능력을 역내 군사 영향력, 비대칭 억지 구조,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 문제와 결합된 하나의 통합적 안보 프레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협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합의 도달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 핵 협상의 향방은 정치적 결단뿐 아니라 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상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의해 좌우된다. 우라늄 농축 수준과 고농축 우라늄(HEU) 재고 규모, 주요 시설의 복구 속도,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검증 체제 복원 여부가 협상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농축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짧아지고 이는 미국과 동맹국의 위기 인식을 급격히 끌어올려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이 복원되고 재고 관리가 가시화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위기 강도를 완화할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이란은 협상 의제를 핵 문제로 한정하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핵 의제 관련하여 이란 지도부는 핵연료 생산과 우라늄 농축을 자국의 주권적 권리로 간주하고 미사일 전력과 역내 네트워크는 체제 생존을 뒷받침하는 핵심 안보·역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이 단계적·부분적 합의에 신중하고 포괄적 합의를 선호하는 이유는 미국에 작은 양보를 조금씩 반복하는 방식의 합의가 결국 체제 안보의 토대를 차례로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란을 둘러싼 안보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미국과 이란이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핵 문제만 다를 때는 제한적 합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사일, 대리 세력, 그리고 인권 문제까지 의제에 포함되면 양측이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은 찾기가 힘들 것이다. 그 결과 협상은 일괄 타결보다는 위기관리 구조에 가까워질 것이며 장기적 불안정 상태가 고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란 문제의 성격도 핵 비확산을 넘어서 중동 안보 질서 재편과 직결된 전략 과제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이란 억제 전략을 이스라엘 및 걸프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 미사일 방어망, 정보 공유 강화 등 새로운 안보 구조와 연계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비대칭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이란이 보유한 핵, 미사일, 그리고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란 문제는 더 이상 하나의 협상 의제를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 경쟁의 핵심축으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군사 옵션과 외교 그리고 핵 협상

2026년 미-이란 위기의 또 다른 특징은 군사적 압박과 외교 협상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에 있다. 현재 위기 국면에서 미국과 이란은 각각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전략적 계산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하나는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통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제한하려는 접근이다. 다른 하나는 제한적 정밀타격을 통해 이란의 핵 및 미사일 역량을 직접 약화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방향은 전면 충돌을 피한 채 군사 억지와 제재를 지속하며 장기적으로 이란을 관리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란 역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협상을 통해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핵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되 우라늄 농축 수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접근 범위를 조절하며 미국을 상대로 협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한 핵, 미사일, 그리고 대리 세력 역량을 강화하여 억지력을 높이는 선택도 고려하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작전에 대비해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을 중동에 배치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전력 집중을 중동에 집결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력은 외교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하는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 단기간 내 이란 체제를 붕괴시키기보다는 이란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약화하고 동시에 협상 압박을 높이는 데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6년 미-이란 위기에서 논의되는 미국의 군사 옵션은 강도와 목표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기지, 그리고 혁명수비대 지휘시설을 겨냥한 제한적 정밀타격은 비교적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압박 수단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타격은 단기간에 정권을 붕괴시키기보다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복구 비용을 높이고 재건 속도를 늦추는 데 목적이 있다. 반대로 여러 핵심 군사 및 전략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공습 시나리오는 이란의 대규모 보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역내 미사일과 드론 공격, 그리고 각지 대리 세력의 동시다발적 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사이버 작전, 비공개 특수작전, 그리고 정보전과 같은 하이브리드 수단은 직접적인 대규모 교전 없이 이란의 군사·치안·정보 체계를 선택적으로 교란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옵션들은 상호 배타적인 단일 선택지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합 또는 강화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수단들을 활용해 전면적으로의 확전을 억제하는 한편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과 협상 주도권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 핵 협상 구조와 쟁점: 합의 가능성과 제약 요인

이번 미-이란 핵 협상은 오만을 통한 간접 채널과 제네바 회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측 모두 협상의 목표와 범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크며 단기간 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우라늄 농축 수준과 고농축 우라늄(HEU) 재고 처리 문제이다. 미국은 농축 상한 설정, 재고의 해외 반출 또는 희석, 그리고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체계 복원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임계 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함으로써 위기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직결된다.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생산을 주권적 권리로 간주하고 있어 농축 활동의 구조적 제한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둘째는 제재 완화의 범위와 속도 문제이다. 이란은 경제 회복과 체제 안정성을 위해 실질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핵 활동 제한과 검증 복원 없이 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는 합의 방식에 대한 접근 차이이다. 미국은 단계적 핵 동결과 검증 복원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합의를 선호하는 반면 이란은 부분적 양보의 누적이 체제 안보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더 포괄적이고 상호합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협상 진전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도 분명하다. 핵 문제를 넘어 미사일 역량, 대리 세력 네트워크, 그리고 인권 문제까지 결합된 복합 안보 구조는 협상 의제를 확장하는 동시에 실제 타협할 수 있는 협상 공간을 구조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또한 양측 모두 국내 정치적 제약을 안고 있다. 미국은 강한 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니고 있으며 이란 역시 핵 권리와 억지 역량을 양보하는 것이 체제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군사 압박과 협상이

병행되는 현재의 위기관리 구조는 협상 동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호 불신을 심화시키는 이중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향후 협상의 전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제한적 핵 동결과 부분적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수준의 합의다. 이 경우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협상이라기보다 긴장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반대로 협상이 실질적 진전이 없다면 군사적 압박과 제재에 더 많은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 전망 및 시사점

향후 미-이란 위기는 전면전으로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작을 것이다. 그러나 긴장과 부분적 완화가 반복되는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중동 차원에서 이번 위기는 이란과 미국·이스라엘·걸프 국가 간 전략적 경쟁 구도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 이란은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라크 등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재, 재정 부담, 그리고 역내 군사적 긴장 속에서 전략적 선택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한편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 간 방공, 정보공유, 그리고 해상안보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 역시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안보 협력 구조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내 정치에서 이란 문제는 2026년 중간선거와 이후 대선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이슈를 통해 리더십과 동맹 결속, 그리고 역지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은 전쟁 비용과 유가·물가 등 경제적 부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한적 군사 행동과 강한 압박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전면 충돌에 가까운 양상으로 확대되면 이라크 전쟁 시기와 유사한 피로감과 정치적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지속적 압박, 선택적 군사 행동, 그리고 제한적 협상을 병행하는 등 중간 수준의 전략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에너지·경제 측면에서도 미-이란 갈등의 장기화는 국제 유가, 해상 운송, 그리고 LNG 시장 전반에 지속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유조선 공격, 항로 우회, 보험료 및 운임 상승 등으로 이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제한적 공급과 보복이 반복되는 형태의 위기가 계속된다면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은 전략비축유 활용, 가격 보조, 세제 조정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려 할 것이다. 이는 국가 내 물가, 재정, 그리고 성장률에 복합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6년 미-이란 위기는 단기적 위기관리 사안을 넘어 중동 질서 재편과 미국 국내 정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란 체제의 불안정, 미국의 관리형 압박 전략, 그리고 이스라엘·걸프 국가들의 안보 구상이 맞물리면서 현재 위기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3차 핵 협상에서 제한적 합의나 간헐적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양국 간 긴장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